

병역거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표명 기자회견

1.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경과보고 및 발언
2. 법조계 입장 - 이석태(민변회장,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3. 출소한 병역거부자 발언 - 나동혁 (2005년 9월 30일 출소)
4. 각계 지지발언
인권단체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평화단체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종교계 -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5.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 한홍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일시 :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이상 35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관련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최상급의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에 봤을 때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 원칙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해왔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부당한 우려 극복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되었고, 특히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과 감축규모 그리고 지난해 감축사실을 종합을 해 보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대체복무제는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검증을 거친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이 증명되었다. 멀게는 1차세계대전 이전부터, 가깝게는 1999년 대만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체복무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효용성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인간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체복무제도도 안보 차원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현재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수많은 검토과정을 거쳐 입법안이 완성되었으며, 지지 의원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비판이 쏟아지던 분위기도 바뀌어서 이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대체복무제 입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반대여론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소신껏 인권의 손을 들어주기 바란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이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아울러, 현재 병역거부 문제로 재판 계류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옳으며, 구속 재판 중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보석 조치하고 입법운동 추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형을 마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기본권을 존중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도 지난 50년간의 상처를 씻기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 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이상 35개 단체)]